

- “나는 친기업적”
- 법인세 7조 원 감면
-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 땅부자 위한 종부세 · 양도세 감면

재벌 친구 이명박은 서민의 적이다

- 민주노총 면담 일방 취소
- “노동유연화가 비정규직 해법”
- “모두 24시간 2교대로
일하면 좋겠다”
- 공공요금 폭등 부를
공공부문 사유화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불도저, 이명박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왼쪽 압박이 커고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압박이 커고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이명박에게 부패 청산, 평화, 진보 등을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어떻게든 경제는 조금

이라도 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 이명박 자신이 “경제, 꼭 살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해 왔다. 문제는 누구의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는 것이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서민들의 움츠러진 살림살이를 펴는 것을 ‘경제 살리기’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는 이런 기대와 어긋난다.

이명박은 자신의 ‘경제 살리기’가 ‘재벌 살리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재벌 총수들을 만나 “제가 친기업적임은 분명하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은 재벌 기업과 외국 자본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규제와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겨두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다.

특히 이명박의 신자유주의는 반노동자적 성격이 분명하다. “노조 활동과 과격 파업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6면으로 이어짐



이명박 시대 전망
1, 3, 6~7면

임종인 의원 인터뷰
- “고려대의 퇴학 처분은
불법 · 무효다”
2면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인터뷰
12면

국제
- 높아지는
이집트 노동자 투쟁의 파고
- 코소보 독립의 의미
4, 9면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분당 사태
5면

정성진 칼럼
- 반신자유주의의 국제적 공통성
8면

맑스와 《자본론》 ③
- 이윤은 어디서 나오는가
7면

서평
- 대재앙을 예고하는 조류 독감
9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배타적 지지,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동당 분당 속에 민주노총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배타적 지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논한다.

파키스탄 총선 평가
부시의 전쟁 동맹이자 독재자였던
무사라프 총선 패배의 의미를 살펴본다.

고려대의 조상모사식 퇴학 폭거
이강수 총장의 “두 번 출교시키기”
퇴학 사건에 분노한 ‘퇴학생’들이 더
강력한 저항에 나서고 있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인용해도 됩니까?

“사람들은 나를 ‘전쟁광’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평화 구축의 초석을 세웠으며 실상 자유는 중동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 나는 나 자신이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한다.”

— 조지 부시의 헛소리

“본분을 넘어 질주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에 비교하는 말이 나온다. 임계점에 달하면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배신감이 분노로 폭발할 것”

— 조갑제의 우려

“이학수 부회장을 불러서 차 한 잔 마시고 귀빈 대접 했다는데 특검 분위기가 수상하다.”

— 삼성특검의 이학수 소환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응

“이젠 과거와 다르다. 불법 행위를 한 만큼 전원 연행해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

— 인수위 앞에서 등록금 대책 마련을 요구한 대학생 27명을 폭력 연행한 경찰

“제명을 당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나의 반칙을 비난하는 사람조차 없고, 제대로 된 반박도 없다. 주장을 다 인정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시한다는 말인가?”

— <조선일보> 인터뷰에 대한 무반응이 섭섭한 주대환 씨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을 찍지 말아야지, 이런 글을 쓰지 말아야지’하는 생각이 마음 속에 드는 게 가장 두렵다.”

—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씨

임종인 국회 의원 인터뷰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은 불법이고 무효”

[편집자] 고려대 당국이 출교생들에 대해 퇴학을 결정하자, 출교생들은 “퇴학은 우리를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이라며 다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출교생들은 “즉각 복학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맞붙>은 고려대 출교생들의 투쟁을 지원해 온 임종인 국회의원을 만나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임 의원은 고려대 당국의 결정이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린 법원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고려대 당국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복학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임 의원은 만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다.



며칠 전 고려대 당국이 출교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출교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데요.

퇴학 처분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법원의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이 나왔으면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을 당장 복학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리려면 현재 2심에 계류중인 출교무효확인 소송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가처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우선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둘째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학생들이 공부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니 일단 학생들을 복학시킨 다음에 소송 결과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은 이런 법원의 취지를 정면 위반한 것입니다.

출교생들이 퇴학무효확인 소송과 학생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내면 바로 구제돼서 이번 학기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 당국은 법마저 무시하며

사실 고려대 당국도 법률적으로 복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퇴학 처분을 한 것은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승과 학생의 관계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려대 당국은 출교생들에게 교수들의 ‘감금’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이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출교생들과 함께한 임종인 의원

건 사과를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고려대 당국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를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이 학생들을 복학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잘못도 없는데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학생들의 사과를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래 교수님들이 교육자적인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것보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려대 당국은 법원의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을 다시 내쫓았습니다. 고려대 당국이 학생들을 관용과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 관계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출교생들은 ‘퇴학’이 결정되자마자 천막농성을 재개했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출교생들의 투쟁을 지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대학은 어느 곳보다도 학문·사상의 자유, 그리고 서로를 존

중하는 인격 우대의 풍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후퇴와 더불어 교수들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누리려 하면서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항복하란 식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고려대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건희 회장 박사학위 수여 저지 시위를 한 학생들을 징계하려 한 것이 보여 주듯이 시장만능주의, 기업우선주의, 다른 사상·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극우적 사고 같은 것들이 고려대에 만연해 있는 것 같아 크게 걱정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고려대가 거기에 부응한다면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양심적인 한국 사람들은 모두 출교생 문제를 보며 고려대가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고려대의 명예를, 고려대 교우들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린 것입니다. 고려대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고려대 당국이 하루라도 빨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학생들을 복학시키고 학생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 · 정리 조명훈

모자보건법 개정 논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많은 주류 언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5가지 사유(우생학적·유전학적,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낙태 허용 기준에 ‘사회적 적응’ 사유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개정안은 낙태 허용 기간을 현행 28주에서 24주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해야

로 단축하는 것과 같은 후퇴도 포함하고 있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과 우파 언론들은 낙태 허용 기준 완화를 비난하며, 그러면 낙태가 폭증할 것이라고 과장한다.

하지만, 낙태 허용 기준 완화가 곧 낙태율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낙태율은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보다 더 높다. 한국 가임기 여성의 낙태율은 1천 명당 29.8(2005년)인데 비해, 1967년부터 낙태가 합법화된 영국은 17.8(2004년)이었다. 한국에서 실시되는 낙태의 대부분이 불법이므로, 한국의 실제 낙태율은 더

높을 게 분명하다.

우파 언론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 운운하며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연막

그러나 이들의 생명 존중 얘기는 위선일 뿐이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라크 전쟁을 굳건하게 지지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몰아 자살과 아동 유기 증가 등을 낳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열광적으로 지지해 온 게 이들이었다. 안전하지 못한 불법 낙태로 사망하는 여성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7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도 강그리 무시하고 있다.

사실, 반낙태주의자들의 ‘태아의 생명권’ 주장은 여성 차별주의를 감추는 연막일 뿐이다. 만약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대립한다면, 왜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해야 하는가? 태아는 생존을 위해서 여성의 신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직 의식이 있는 인간이 아닌데 말이다.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산모보다 태아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낙태는 추상적인 생명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다. 다시 말해, 여성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에 대한 문제다.

보건복지부 공청회 개정안 토론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낙태의 허용 기준 완화를 지지하는 옳은 입장에 섰다.

앞으로 법 개정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든, 이제 한국의 여성운동은 그동안의 침묵을 넘어서 낙태 합법화 문제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 해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낙태권을 분명히 주장해야 여성 차별주의자들과 성적 보수주의자들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정진희



이라크의 해방과 한국군 철수를 위해 행진하자

3-16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일시: 3월 16일(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역 광장 /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3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열린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2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국제반전회의에서 결정됐다.

국제반전회의에 모인 반전 단체 대표단들은 3월에 이라크 점령 종식과 이란 공격 반대를 위한 공동 반전 시위를 하자고 호소했고, 현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3월 15~22일 반전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이라크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된 미군의 무차별 폭격은 군인들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병원과 학교가 파괴됐고 점령 때문에 1

백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실업률이 60퍼센트대로 치솟았고 인구의 70퍼센트가 안전한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있다. 인구의 20퍼센트가 살던 곳을 떠나 국내 외를 떠돌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이런 아मान을 날고도 이라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지난해 부시는 미군 2만 8천 명을 이라크에 증파했지만 여전히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2007년은 점령 기간 중 가장 많은 미군이 목숨을 잃은 해다. 종파간 분열을 부추겨 점령을 유지하려던 전략은 미군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다.

부시는 국내에서도 심각한 정치 위기에 빠졌다. 그의 전쟁동맹이었던 스페인의 아스나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일본의 아베, 영국의 블레어, 호주의 하워드는 모두 권좌에서 쫓겨났다. 개혁 열망을 엮고 당선한 노무현의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라크 파병 결정 뒤였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노무현의 바통을 이어 받아 노골적으로 친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명박은 이라크인들의 피를 대가로 이라크 "기름밭"을 탐내고 있다. 또, 유엔 평화유지군(PKO) 상설 파병부대 1천 명 확보,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PSI)과 미사일 방어(MD)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

세계 3위 파병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반전 운동이 건설돼 왔다. 매년 파병이 거듭됐지만 파병 연

장안은 저항에 부딪혀 도둑 처리를 반복했고 주둔 규모도 축소해야 했다.

그러나 전쟁광들은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제 발로 전장에서 나가지 않는다. 이명박 취임 이후 첫 대중집회가 될 3월 16일은 부시의 새로운 전쟁 파트너가 되려는 이명박에게 맞불을 놓는 중요한 날이다.

2003년 2월 15일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참가한 위대한 반전 시위는 미국 제국주의와 자원을 겨룰 '또 하나의 수퍼파워'를 깨웠다. 지금이 바로 '수퍼파워'가 여전히 견재하다는 것을 보여 줄 때다. 3월 16일 이라크의 해방과 한국군을 포함한 모든 점령 군대의 철군을 위해, 한미 전쟁동맹을 강화하려는 이명박에 맞서 함께 행진하자.

김덕엽

이명박 내각

이명박의 불도저식 조각이 가관이다. 국무위원 명단에는 친기업·친제국주의 우익들이 득시글댄다.

특히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다행히 낙마한 어윤대는 이명박의 분신과 다를 바 없다. 그는 고려대 총장 시절 '영어 몰입 교육'을 선도했고, 고교등급제 실시와 "등록금 1천5백만 원" 발언 등 가난한 학생과 부모들을 울리는 데 거침이 없었다. 삼성 이견희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주며 급실거리고 이에 항의한 학생들은 출교시켜 버렸다. 이명박의 교육 파괴 구상을 몸소 실천해 온 것이다. 위장전입과 땅투기까지 이명박을 빼닮은 게 탄로난 그는 최종 발표 직전 미끄러움을 뚫지만, 새로 낙점된 김도연도 '평등주의 팽배가 이공계 위기의 원인'이라며 평준화 해체와 대입 자율화를 주장하는 구제불능의 시장주의자다.

부패와 반동 DNA 공유자들

이명박의 'DNA 인사', '쌍둥이 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경부 장관에 내정된 강만수는 김영삼 정부 재경부 차관을 지낸 IMF 위기 주역 중 하나다. 법인세·양도세·특소세 등 기업과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을 대폭 삭감하는 데 앞장서고도 더 깎아 주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종부세 완화, 심지어 법인세 폐지까지 주장해 왔다.

'부패·조폭'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의 부회장인 이윤호를 산자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그는 한화 김승연의 조폭 행각을 "누구니까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싼 바 있다. 강만수와 이윤호는 기업 규제를 "최우선으로" "회기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 정종환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고속철도를 건

설하며 지을 스님의 목숨을 건 항의에도 천성산 구간 공사를 밀어붙여 불도저 자질을 입증한 바 있다.

이명박의 시장주의 때문에 폐지 직전까지 갔던 통일부는 지독한 우익 남주홍에게 맡겨졌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대북 협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국의 네오콘' 남주홍은 6·15 공동선언을 "대남 공작문서"라고 우기고 "한총련과 같은 친북 단체들을 타도하자"고 주장한다. '통일 방해 장관'이란 말이 나올 만하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김성이와 대표적 '올드라이트' 단체인 자유총연맹의 부총재 이준호가 꿰찼다. 외교통상부 장관에 내정된 주일대사 유명환도 한미동맹 신봉자로 유명하다.

반동적인 인물들만 끌어 쓰다 보니 이들이 뽑어내는 오물도 만만치 않다. 어윤대

에 이어 차기 총리 한승수도 화려한 부동산 투기 경력에 폭로됐다. 인수위는 대낮에 지자체 공급으로 '장어 항응'을 받는 등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특검팀은 벌써 면죄부 발급을 작심한 듯하다. 도곡동 땅은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모호한 발표로 이명박을 보호했던 검찰보다 후퇴해, 이명박의 형 소유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명박의 더러운 본색이 뚜렷해지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인수위의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다.

이명박은 부패·추문으로 얼룩진 자들의 출세길은 활짝 열어 줬지만 진보 운동에게는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송헌아 선전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노동자·민중 운동은 드러나는 이명박의 반동 청사진에 맞선 강력한 '견제 세력'이 돼야 한다.

송주

》관련 기사 6~7면

이집트 노동자 파업이 친미국가를 뒤흔들다

호쌌 엘하말라위(이집트 언론인)

지난 2월 17일 이집트의 가즐 엘마할라 방직 공장 노동자들이 호스니 무바라크 친미 정권의 종식을 요구하며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마할라 방직 공장은 중동에서 가장 큰 방직 공장이다. 최근 마할라 공장 노동자 2만 7천 명의 투쟁 때문에 무바라크 정부는 경제적 양보 조치를 취해야 했다.

마할라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문을 박차고 나오며 “무바라크는 물러나라! 너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고 외쳤다. 노동자들이 나일강 삼각주에 도달했을 때, 지역 주민들 1만 명이 가세했다.

마할라 노동자 시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됐다. 시위는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국가임금위원회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처음 회의를 열기 전날에 벌어졌다.

이집트의 최저임금은 1984년 이래 6천 원으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그 사이 물가는 크게 뛰었다. 노동자들은 월 최저임금을 20만 원으로 올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좌파 활동가

공장의 좌파 활동가들이 비밀리에 이시위를 조직했다. 사장들은 중무장한 경찰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공장문을 박차고 나가 경찰들을 물리쳤다.

어떤 노동자들은 빵을 손에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부자들은 닭과 비둘기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왜 매일 콩만 먹어야 하나?” 하고 소리쳤다. 또 다른 노동자들은 무바라크 아들이자 그의 후계자인 가말 무바라크를 조롱했다. “가말 무바라크, 네 애비한테 우리가 그를 매우 싫어한다고 전해라!”

법외 방직 노조의 활동가인 카말 알파유미는 시위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이집트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는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합니다. 정부와 사장들이 독식해서는 안 됩

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다. 지난 달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이 만든 국경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집트 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동안 무바라크 정부는 하마스 — 2006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승리한 저

카이로 반전 회의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가 2008년 3월 27일~30일에 열린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집트 활동가들이 매년 개최해 온 이 회의에는 국제 반전 운동, 노동조합 운동, 좌파 정당과 급진 정당, 민족해방 운동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왔다.

이번 카이로 반전 회의의 특별 주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항의하는 국제적 캠페인을 어떻게 확대할

가즐 엘마할라 노동자 시위대

항운동 세력 — 를 무너뜨리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에 호응해 국경을 통제해 왔다.

이집트 보안 군대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저항 투사들에 맞서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이집트 폭동 진압 경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구타하는 장면이 이집트 전역에 방송됐고 카이로 시내에서 이에 항의하

것인가’이다. 지난 1월 23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 수만 명이 이집트 국경을 넘어 오자, 이집트 경찰은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야당 활동가들 수백 명을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이들이 카이로 도심에서 집회를 조직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무슬림형제단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의 지도자들이 이번 카이로 반전 회의에서 연설할 것이다.

2008년 카이로 사회 포럼은 오늘날 이집트 사회 운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지금 이집트에서는 지난 30년을 통틀어 가장 큰 파업 물결이 일어나고 있

는 시위가 벌어졌다. 무바라크는 한 발 물러서서 하마스와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투쟁의 축이 다시 이집트 노동계급에게 옮겨갔다. 2월 17일 시위는 2006년 가즐 엘마할라에서 시작된 노동자 투쟁 물결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당시 마할라 노동자들이 보너스 지급을 둘러싸고 벌인 투쟁에서 얻은 성과는 철도 노동자, 간호사, 건설 노동자, 세금 징수원 등 다른 부문 노동자의 기준이 됐다.

2월 17일 시위는 이집트 노동계급 투쟁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예전에 마할라 노동자들은 먼저 자기 공장의 고유한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시작했고, 무바라크 정부가 노동자 편에서 사측에 압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랐다.

반무바라크 구호는 현재 이집트 노동계급 운동이 정치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시위에서는 1977년 ‘빵 폭동’ 이후 최초로 거리 시위대가 전국적 요구를 외쳤다.

지금의 투쟁 물결은 2000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서 시작됐다. 그것은 2003년 3월 20~21일에 카이로 타히르 광장에서 열린 반전 시위로 연결됐다.

시위가 벌어진 광장 이름을 따 ‘타히르 인티파다’로 불리게 된 이 날 시위 덕분에 사람들은 무바라크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이 변화를 바라는 중동 운동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에 맞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에 참가했다.

노동자 세션에는 이집트 전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참석할 것이다. 여기엔 최근의 대규모 파업 행동에서 지도적 구실을 했던 활동가들도 참석할 것이다. 그 밖에도, 대학 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운동, 지주에 맞선 농민들의 저항, 여성 해방 투쟁에 관한 세션들이 열릴 것이다.

민족 간 갈등을 고조시킬 코소보 독립

크리스 뱌버리
영국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지난 2월 17일 코소보 의회가 일방적으로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신속하게 독립을 승인했다.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은 이 지역의 민족 간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다. 또, 이것은 서방과 세르비아의 핵심 동맹인 러시아 사이의 ‘신냉전’을 격화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세르비아는 1999년에 나토가 주도한 전쟁의 표적이었다. 미국, 영국, 기타 서

방 국가들의 전폭기들이 78회에 걸쳐 이 옛 유고슬라비아공화국의 일부를 폭격했고, 이 과정에서 교량, 공장, 발전소, 심지어 TV 방송국도 파괴됐다.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과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22만 5천 명의 코소보계 알바니아인들이 실종됐고, 세르비아 보안 군대가 ‘민족청소(민족 학살)’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전쟁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민족청소의 증거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저명한 언론인인 로버트 피스크는 “전쟁이 시작되고 5개월 간 죽은 세르비아인들의 숫자는 나토가 폭격을 시작하기 전 5개월 동안 세르비아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한 알바니아인들의 숫자와 비슷하다” 하고 보도했다.

코소보 신임 총리 하심 타치는 전쟁 당시 코소보해방군(KLA)의 지도자였다. 그는 정적들을 암살하고 고문한 전력이 있고, 무기 구매 계약을 하면서 부정축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학살

타치와 그의 지지자들은 ‘대알바니아’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들은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의 일부 영토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또, 그들은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인을 포함해 다른 소수민족들을 내쫓고 싶어한다. 코소보의 소수민족들은 고통스런 경험을 했고, 나토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

KLA는 원래 CIA가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명한 단체였는데, 전쟁 동안 줄지에 미국과 나토의 중요한 동맹이 됐다.

서방 전폭기들이 베오그라드를 포함해 다른 세르비아 도시들을 파괴하는 동안, 코소보에서 KLA는 나토의 공중 지원을 받으며 나토 침략을 돕는 지상군 구실을 했다.

서방은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군대를 축출했고, 그 뒤 나토군이 치안을 담당하고 유엔이 코소보 지역을 통치했다.

» 9면으로 이어짐

‘혁신 비대위’에 좌파적 비판을 제기하다

2월 3일 당대회에서 국가 탄압에 타협하고 대중 운동과 거리를 두는 등 당의 우경화를 추구하는 심상정 비대위(이하 심 비대위)의 혁신안은 다수 대의원들에 의해 거부당했다. 심 비대위는 사퇴했고 의원단총회에서 천영세 비대위(이하 천 비대위)가 구성됐다.

그런데 천영세 직무대행은 언론을 통해 “심 비대위의 혁신 방향과 취지, 재창당의 기본 방향은 받아 안고 간다”며 당대회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천영세 직무대행은 심 비대위의 최기영·이정훈 당기위 제소의 유효성도 인정했고, “당헌 당규 위반이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천영세 비대위가 최기영·이정훈 당원을 면회가서 자진탈당을 권유한 사건도 천 비대위가 심 비대위와 다르지 않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의원단이 지난 5년간 당을 오른쪽으로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했다는 점도 이런 심증을 더 굳히게 했다.

그래서 2월 19일 중앙위에서 천 비대위가 ‘혁신·재창당 방안’ 추진을 위해 자신들에게 전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우리는 지지할 수 없었다. 비록 천 비대위가 중앙위에 내놓은 ‘혁신·재창당 방안’이 매우 모호했지만 말이다.

중앙위에서 ‘다함께’ 소속 중앙위원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자주파 그룹들은 우리의 비판에 눈총

을 쏘고, 토론 자체를 심드령해 했다.(이처럼 토론을 꺼려하는 자세야말로 혁신 대상이다). 어렵게 구성한 새 지도부를 흔

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천 비대위의 잘못된 ‘혁신안’을 사실상 지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2월 19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그래도 ‘혁신·재창당 추진 결의 건’을 전면 삭제하자는 ‘다함께’의 수정동의안을 참석한 중앙위원 중 30퍼센트가 지지했다.

천 비대위는 심 비대위의 ‘비례후보 전략공천’도 고스란히 계승했다. 비례후보 1번부터 6번까지 비대위가 공천권을 갖고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겠다는 안이었다. 자주파의 독식 등 “당의 폐쇄성 극복”을 위해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천 비대위가 심 비대위의 우경적 혁신안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어떤 검증 장치도 없이 전략공천 전권을 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함께’는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동의안은 36퍼센트의 중앙위원들이 지지했다.

분당 사태를 딛고 총선 대응을 서둘러야 하므로 천 비대위를 지지해주자는 압력 속에서도 ‘다함께’ 등의 좌파적 입장이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것이다.

천영세 직무대행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혁신 방향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당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민주노동당 온건화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천 비대위의 방향을 지켜보면 서 당의 우경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신당파는 민주노동당 파괴 행위를 그쳐야

지난 17일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민주노동당 분당은 기정사실이 됐다.

분당의 한 계기가 된 2월 3일 당대회는 결코 ‘자주파’ 대 ‘평등파’의 대결도, ‘혁신’ 세력과 ‘수구’ 세력 간의 대결도 아니었다. 그것은 당을 우경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선 투쟁이었다.

당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창당 이래 최대의 권한을 부여해 준 당원들에게 우경적 ‘혁신’안을 강요했다. 대의원들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이것을 거부하자 당대회장을 떠나 버렸다.

심상정 비대위는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조처가 ‘당원 정보 유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였다.

심상정 비대위는 ‘민주노동당’, ‘운동권당’을 문제삼으며 민주노동당을 우경화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이 연일 민주노동당 분열 사태를 크게 보도했고 특히 ‘종북주의’라는 마녀사냥식 딱지 붙이기에 열광했던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신당 창당 선언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이 ‘사회연대전략’ 같은 정규직 양보론에 “힘과 공을 들이지 못

[한]” 것이 문제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도 한 때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다르게 생겼다고 얼굴에서 나가라고 하겠나?”며 분당파를 비판하더니, 갑자기 돌변해 신당파에 합류하며 민주노동당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노회찬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고진화하고도 함께할 수 있다며 추파를 던졌다. 대자본가 정당 소속의 정치인파도 함께할 수 있다면서, 노동자·민중 운동의 일부인 ‘자주파’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

언론 등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종북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심상정·노회찬 의원과 신당파 세력은 분당 과정에서 끊임없이 비신사적 행동을 하고 있다.

두 의원은 자신들의 명망과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 탈당을 부추기고 있다.(민주노동의 ‘배타적 지지’와 관련된 글은 <맛불> 온라인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의정부 지역위에서는 목영대 위원장 등 신당파가 지역위 해산을 반대하는 대의원을 배제한 채, 골방에 몰래 모여서 지역위를 해산시켰다. 이것은 당연히 무효다.

분당질

서울 강남지역위원회에서도 김현우 위원장과 신당파가 일방적으로 지역위를 해산하려 했으나 몇몇 대의원과 평당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호소로 이런 시도를 좌절시켰다.

신당파인 조현연 교수는 “민주노동당

과 진보신당이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갈 수는 없다. 결국 하나는 소멸해야” 한다며 종파적 태도를 드러냈다.

매우 애석한 일이지만 분열만은 막아보려 한 진지한 당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신당파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더는 민주노동당을 흠집내거나 ‘분당질’하지 말아야 한다. 탈당을 무기삼아 남아있는 당원들과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데 골몰한다면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신당파 내부의 정치적 이견을 어떻게 극복할지, 분당도 불사할 만한 자신들의 원칙과 입장이 무엇인지나 분명히 하는 데 매진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비록 같은 당에서 함께 머물지는 못할지라도 이명박 정부에 맞선 반전·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 함께하게 되길 바란다.

장호중

소책자

제2개정
증보판

민주노동당의 위기

최현우 지음

《민주노동당의 위기》

《위기의 민주노동당 —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하는가?》의 제2개정증보판

값 3천 원

일심회
마녀사냥과
국가보안법

《‘일심회’
마녀사냥과
국가보안법》

값 2천 원

이명박의 ‘재벌 천국’ 시대와 투쟁의 과제

전지윤

» 1면에서 이어짐

이 같은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는 이명박 정권의 계급적 기반에서 비롯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한국의 전통적인 대자본가 계급에 기반한 정치인이고 정당이다. 돈, 조직, 인력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와 정경유착 구조 속에서 주로 영남 출신의 정치인, 관료, 군인, 재벌들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정당이고 이명박은 현대그룹 CEO 출신이다.

대선에서도 기업주들과 주식·땅 부자, 투기자본가 등 기득권 세력들은 압도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실천은 대자본가와 고위 관료, 투기자본, 건설족, 주식·땅 부자들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 43개 핵심과제, 1백92개 국정과제’도 이것을 잘 보여 준다. 여기에는 ‘FTA 체결 다변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감세, 공공부문 사유화’ 등이 ‘핵심과제’로 포함돼 있다. 반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는 1백92개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는커녕 ‘중점과제’에서도 밀려나 ‘일반과제’로 꼬트머리에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노동안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고용경직성, 고임금 등을 모두 ‘경제

살리기’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의 ‘재벌 살리기’는 곧 ‘서민 죽이기’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착취를 강화로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시도는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은 또한 세계경제 11위권이 라는 ‘국격(國格)’에 걸 맞는 소제국주의적 개입을 원한다. 경제적 경쟁과 자원 확보 경쟁을 뒷받침할 군사력을 원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2년까지 1천 명 수준의 PKO 상비군을 육성해 세계 10위권의 소제국주의적 파병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이명박의 ‘재벌 경제 살리기’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나하나 연초부터 벌어진 세계적 주가 폭락이 보여 주듯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불안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도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주가 폭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의 정책은 불안정한 세계경제에 한국경제를 더 깊숙이 연관시키고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의 개입 능력을 더 약화시키는 방향을 하고 있다.

중동에서 더욱 커지는 미제국주의의 실패와 위기는 이명박의 파병 등 친제국주의 정책도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대북’ 문제에서도 중동에 발이 묶여 있는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유화 국면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이면에서 모순된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안정이 커질수록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격화할 수 있고, 이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명박의 친미적 대북 강경 노선은 대중적 불만의 타겟이 될 수 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이명박은 무엇보다 조직 노동자 운동을 약화시키고 싶어한다. 고용 유연화와 사유화를 가로막는 가장 단단한 장벽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도 “노조의 이렇고 저렇고 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좌우되는 나라”를 바꾸자고 주장한다.

우파와 보수적 지배자들은 이명박이 불도저처럼 조직 노동자 운동을 공격해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최근 이명박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이런 이명박에 맞서 “기차와 전기와 가스를 끊는 투쟁”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과 민주노총은 지금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보인다.

물론 이명박도 조직 노동자 운동이 가진 막강한 잠재력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면 공격을 시도하기보다 각개격파하려 할 것이고, 일시 봉합 시도도 있을 수 있다. 양극화가 심각화수록 양 쪽 모두에서 그것을 중재·봉합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기 마련이

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계급투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격화할 계급투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명박은 민주주의적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 노무현 정부가 ‘묻지마 파병’과 ‘묻지마 FTA’를 추진하며 보여 줬듯이 친제국주의·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선 언론·표현·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

이명박 시대의 국회도 자신들을 선출해 준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들을 내릴 것이고, 진정한 결정권은 삼성 같은 선출되지 않는 자들이 가질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도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은 “좌파 적출 수술을 할 단계”, “간첩 잡는 실적이 부진하다”며 발뺌을 드러낸 바 있다.

노무현은 그나마 포퓰리즘적 기반과 성격이 있었지만, 군사독재 정부의 계승자인 한나라당의 지도자이며 분명한 우파인 이명박 정부의 반동 시도는 더 심각할 것이다.

민주적 권리를 갉아먹으려는 이런 시도를 방지할 경우, 운동의 기반과 힘은 잠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시대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우리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가 돼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의 시도는 강력한 반발과 격렬한 투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히 두드러질 문제는 부패 문제다. 김대중·노무현의 당과 정부가 부패의 계승자들이라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부패의 원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털면 쓰레기가 쏟아지는’ 수준의 비리 의혹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부패의 저수지인 삼성 이견회와 김일회 연결돼 있다.

이미 인수위 구성, 정부 조각을 둘러싸고 벌어진 쫓대기와 제 사람싱기, 나눠 먹기 등도 치열했다. 더구나 자연·학연 등을 통한 이명박의 코드 인사도 만만치 않다.

검찰, 국제정, 금융감독원 등이 부패를 감시·처벌하긴커녕 부패를 은폐하고 부패의 일부가 되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통치기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현재 이명박 특검과 삼성 특검도 면죄부 재발급 수순을 밟고 있지만, 부패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서 폭발을 기다릴 것이다.

정치 위기와 양극화

격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 이명박의 ‘재벌 살리기’와 ‘부자 성공시대’, 노동 탄압, 민주주의 파괴, 부패 스캔들 등은 정치 위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이명박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벌써 이명박의 지지율은 50퍼센트 대로 하락했는데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30~40퍼센트나 낮은 수준이다. 이명박 인수위가 잘했다는 여론은 36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명박은 “요즘 웃기는 웃지만 걱정이 태산”이며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라고 했다.

이런 추세가 더 커지면 총선 압승도 쉽지



일러스트 : 박설

공동전선과 변혁 정치조직

않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명박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커지면 통합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도 ‘원족 캄박이’를 켜며 대중의 환상과 기대를 더 부추길 수 있다.

물론 순학규의 ‘쥘통 한나라당’과 자중지언에 빠져 무너지고 있는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이 얼마나 반사이익을 얻을지는 의문스럽다. 더구나 근본적으로 친제국주의·신자유주의를 반대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에 기반한 통합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은 이명박 불도저의 브레이크가 될 수 없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명박 계와 박근혜 계의 아귀다툼은 격렬한 공전 갈등으로 드러났다. 만약 정치 위기가 더 심화하면서 박근혜 계가 탈당하거나 이회창 쪽과 힘을 합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보수 우파 지배자들의 분열을 뜻할 것이다.

엔진이 약한 불도저

이명박 불도저의 엔진은 강력하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크게 작동한 정서는 ‘이명박이 좋아서’보다는 ‘노무현이 싫어서’이었다. 이명박이 얻은 표는 전체 유권자 대비 30퍼센트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이명박이 부패하고, 반민주적이고, 친재벌·친미적인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그 ‘경제 살리기’가 좌초하면, 경제도 살리지 못하면서 ‘더구나’ 부패하고, 반민주적이고, 친재벌·친미적인 이명박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 운동은 한나라당 정권에 맞선 거대하고 강력한 투쟁의 경험이 있다. 노태우 정부에 맞선 1991년 5월 투쟁, 김영삼 정부에 맞선 1997년 노동법 남치기 항의 민주노총 파업 등이 그것이다. 특히 1997년 민주노총 파업은 김영삼 정부를 ‘사망’케 했다. 2004년 탄핵 반대 투쟁도 한나라당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를 분쇄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직 결정적 패배를 경험한 바 없는, 잠재적으로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조직 노동자 운동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망스런 선거 결과를 패배주의적으로 평가하며 비판주의에 빠지고 온건화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주노동당도 지금의 분열과 위기를 시급히 극복하고 이명박의 위기와 정치적 양극화 속에 급진화하는 대중을 정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급진적 대안과 요구를 고수하면서도 개방적인 자세로 대중에게 다가가 광범한 세력을 포괄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와 반동에 맞서는 강력한 정치 대안과 선거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맑스와 《자본론》③

이윤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글은 《자본론》에 관한 연재 기사 세 번째 편으로, 착취의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글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에 비례함을 알아보았다.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산 노동’(노동자들이 방금 막 투입한 ‘신선한’ 노동)과 ‘죽은 노동’(원자재, 기계 등에 집적된 과거의 노동)이다.

예컨대 어떤 신문이 한 시간의 산 노동(인쇄 기사들의 노동)과 두 시간의 죽은 노동(종이와 윤전기 등)으로 생산된다고 하자. 이 신문은 세 시간의 노동에 상응하는 액수에 팔릴 것이다.

신문사 사장은 원자재 비용과 생산 과정에서 마모되는 기계에 대한 비용을 치려야 한다. 즉 그는 두 시간의 노동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두 시간분을 지불하고 나면 사장에게 남는 것은 한 시간 분의 금액이다. 그러나 사장은 아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과연 그는 임금으로 얼마를 지급할까? 바로 이 대목에서 맑스는 스스로 《자본론》의 ‘가장 탁월한 것 중 하나’라고 여긴 통찰을 제시한다.

노동자들은 한 시간의 노동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임금을 주고 사는 것은 오직 노동자들의 ‘노동력’, 즉 그들의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들의 노동 자체가 아니다.

노동력의 가치, 달리 말해 임금의 가치는 그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기타 재화·서비스의 가치다.

노동력의 가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체로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보다 노동력의 가치가 훨씬 작다.

신비화

앞의 사례로 돌아가서, 신문사 노동자들이 하루 1천 시간의 노동을 투입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한 시간 노동의 가치가 2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의 부가가치가 새로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지급된 임금 총액이 1천만 원이라면 창출된 가치의 절반만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본가는 1천만 원어치의 ‘잉여 가치’를 획득하고, 그것이 그의 이윤이 된다.

바로 여기에 착취의 기초가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창출한 가치를 지어 받지 못하고, 단지 임금을 지급받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착취 과정도 자본주의 하에서 일어나는 다른 수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은폐되고 신비화된다.

우선 노동자 자신도 노동 시간 중에



서 자신의 임금으로 돌아올 부분과 사장의 이윤으로 갈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 자본주의적 착취는 월급 봉투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다.

맑스도 지적했듯이, ‘노동자를 24시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반나절뿐이라 해도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자본가를 역시 생산 과정에 대해 맡겨두지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가를 눈에는 기계와 원자재도 산 노동과 똑같은 이윤의 원천이다.

그러나 맑스의 일차적 관심사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사고 과정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객관적 운동 법칙이었고, 이에 대한 맑스의 분석은 자본주의와 착취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혀냈다. 달리 말해, 착취를 끝까지 내려면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도 착취에 대항하는 싸움들이 벌어지며, 이러한 싸움을 통해 노동계급은 자신감과 조직력을 키울 수 있다.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불리는 방법 하나는 노동자들을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다.

맑스는 이를 ‘절대적 잉여가치의 중대’라고 불렀다. 이러한 시도는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둘러싼 싸움을 초래한다.

맑스는 또한 노동자들이 오래, 열심히 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상대적 잉여가치’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전체의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대적 잉여가치도 함께 증대한다.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상품들이 값싸지고, 그에 따라 노동 시간에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임금만큼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더 짧아지며 자본가는 그만큼 더 많은 잉여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대립인 노동자/자본가 간의 대립에 대해 살펴봤다. 다음 주에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또 한 가지의 대립, 즉 총 잉여가치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본가들 사이의 대립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지프 추나라

한나라당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를 분쇄했던 2004년 탄핵 반대 시위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세계적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직면한 공통 쟁점들

지난주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증진국에서 신자유주의 경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벤 파인, 뵘 제습, 알프레도 사드필호 등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좌파 학자들과 터키의 진보학계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이 학술대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흥미롭고 새로웠다.

우선, 신자유주의가 한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모든 좌파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듯했다. 뵘 제습은 1980년대 이후 대두한 신자유주의가 지난 1991년 옛 소련 블록의 붕괴와 함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1년 9·11 이후 한풀 꺾이기 시작했으며, 2007년 미국의 서프프라임모기지 위기와 함께 결정적으로 퇴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뵘 제습은 이와 같은 퇴조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의 논리’, ‘금융화의 논리’, ‘상품화의 논리’로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무의식층’에 침잠해 계속 영향을 넓혀갈 것이라고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벤 파인도 199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대두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 퇴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도 산업자본의 축적이 금융시장과 의제자본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고, 국가와 민간금융의 융합이 특징인 ‘금융화의 논리’는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면서, 진보진영은 경제적 재생산을 ‘금융화의 논리’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뵘 제습과 벤 파인의 주장에 대해 ‘금융화의 논리’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접근의 이론적·실증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 자본이 경제 위기에 따른 수익성의 위기를 노동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알프레도 사드필호는 신자유주의를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으로 환원하는 정치적 관점을 넘어서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이론적 분석과 대안적 축적체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주의 국가모델

터키 진보학자들이 발표한 터키의 신자유주의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매우 흥미로웠다. 이 연구 결과들은 신자유주의가 국제적으로 퇴조하고 있다는 제습과 파인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터키에서는 투기적 금융자본과 자본주의적 농업기업의 득세, 공기업의 사유화, 프롤레타리아트화의 급진전 등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점은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현재 집권 이슬람주의 세력인 ‘정의개발당’(AKP)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은 이슬람주의 세력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걸림돌로 간주하고 있지만, 터키에서 신자유주의의 주도 세력은 다른 아닌 이슬람주의 집권당이였다.

한편 터키의 진보진영 다수는 이슬람주의 집권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1923년 터키 건국 이래 케말 아타튀르크가 추진했던 국가주도적 발전모델, 즉 ‘민족주의적 발전주의 모델’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장하준 교수나 일부 NL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복원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였다.

실제로 다수의 터키 진보 학자들은 현재 터키 정치경제의 주요 대립과 갈등은 앙카라와 터키 동부 내륙 지역(아나톨리아)을 기반으로 한 이슬람주의 집권세력의 신자유주의와 유럽 대륙에 맞닿은 이스탄불을 거점으로 한 세속적 민족주의적 발전주의 세력 간에 형성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전자가 이슬람주의 계열 중소자본과 금융자본을 물적 기반으로 한다면, 후자는 대규모 산업자본과 관료·군부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터키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모순의 본질적 측면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혹은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의 모순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모순, 즉 자본일반의 모순일 것이

다. 그럼에도 대다수 터키 진보학자들은 최근 프롤레타리아트화의 급속한 진행 등을 비롯한 터키의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의 근원을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화’, ‘한머니’ 등에서 찾는 케인스주의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급속한 프롤레타리아트화까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환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터키의 노동자계급 총수는 1995년 8백41만 명에서 2000년에 1천49만 명, 2007년에 1천3백41만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농민 총수는 1995년에 5백90만 명에서 2000년에 4백66만 명, 2007년에 3백15만 명으로 급감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급속한 프롤레타리아트화는 이미 19세기 서구에서, 20세기 후반기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요 신흥공업국에서, 또 지난 세기 말부터는 중국의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터키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사회적 쟁점은 이슬람주의 집권당이 ‘관공서와 대학에서 여성들의 ‘히잡’ 착용 금지 규정’을 폐지한 일이었다. 이 정책은 아타튀르크 이후 ‘세속화’와 서구화 차원에서 실시돼 왔다. 아이러니이게도 이슬람 집권당은 사회경제정책에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주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히잡’ 착용 문제에서는 반대 입장을 채택했다.

그동안 터키의 세속주의 정권과 군부독재 정권이 채택해 온 여성의 ‘히잡’ 착용 금지법은 문화적 다양성과 자유에 대한 억압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터키 진보진영에서는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반자본주의자’(Anticapitalist)와 같은 극소수 트로츠키주의자들만이 ‘관공서와 대학에서 히잡 착용 금지법’ 폐지 조치를 지지한다. 군부세력은 물론 대부분의 진보진영까지 이 조치가 ‘세속화’ 경향에 역행하고 여성 차별과 터키의 ‘재이슬람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히잡

터키에서는 최근 이슬람주의 세력이 집권했음에도, 세속주의적 군부와 관료 세력이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국가이념인 ‘케말주의’에 대한 학술적 비판조차 형사 처벌될 정도다. 이들 세력은 한편에서는 현재 이슬람주의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히잡’ 착용 금지법 폐지 등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반대를 선동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터키 ‘반자본주의자’ 썸 우즈 동지가 ‘비밀 국가’라고 표현한 은밀한 비공식 채널을 형성해 끊임없이 군부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990년 23.7퍼센트에서 2005년 9.2퍼센트로 급감한 데서 보듯이, 터키 조직노동자 세력은 취약한 편이다. 또, 최근 합법화된 터키공산당이 작년 총선에서 0.22퍼센트밖에 득표하지 못한 사실에서 보듯이, 급진좌파의 정치적 영향력도 아직 미미하다. 이런 점 등도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터키에서는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이 진행되면서, 사회 발전과 변혁에 대한 열망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더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2002~2005년 터키의 연평균 GDP 증가는 7.5퍼센트나 됐다. 학술대회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터키 진보학자들의 높은 이론적 수준과 치열한 정치적 의식, 우리 나라 신촌에 해당되는 이스탄불의 ‘독립’ 거리에 넘쳐났던 청년층들의 열기는, 터키가 성소피아 사원으로 상징되는 비잔틴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불균등결합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세계사의 장을 열었던 것처럼 21세기에도 새로운 세계사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터키와 우리 나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이에 맞선 국제적 투쟁은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계급과 민족 쟁점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는 반신자유주의 국제적 투쟁이 국제적 연대를 통한 상호 교류, 상호 학습 속에 서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마르크스와 트로츠키》의 저자이고,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역자이다.

대재앙을 예고하는 신종 전염병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돌베개

정병선

《슬럼, 지구를 뒤덮다》를 발표하면서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 문제를 폭로한 마이크 데이비스가 또 한 권의 역작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을 발표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였던 권영길 의원이 “[자신이] 정치인의 길을 걷는 데 영향을 끼친 책”으로 소개한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의 저자이기도 하다.

조류 독감은 전 세계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 가장 최근의 질병이다. 어쩌면 대량 사망 사태가 한국에서 곧 일어날 수도 있다. 많은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2008~2010년을 전염병 대유행의 시기로 예측한다.

2005~2006년과 2006~2007년 겨울의 조류 독감 사태만큼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올 겨울에도 이미 전라남도 광주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 눈을 돌려 바깥 세계를 살펴보면, 발병 지역의 광범함에 압도당할 지경이다.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영국, 독일이 올 겨울 조류 독감 발병 대상국 목록에 올라와 있다. 가금류 수십만 마리가 도살됐고, 인체 간 감염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네이처〉는 2004년 7월 사실상 조류 독감을 근절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H5N1은 이제 아시아 가금류의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았다. 놈은 확고한 생태적 지위를 구축했고, 이를 발판으로 아주 오랫동안 인류에게 대유행병의 위협을 가할 것이다.”

1997년 홍콩의 농장과 가금류 시장에서 H5N1이 처음 발병했다. 이 과정에서 18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것을 보면, 2003~2007년에 전 세계에서 3백 43명이 감염돼 그 중 2백12명이 사망했다. 이 가공할 치사율은 1918년 독감 대유행 사태를 무색하게 만든다.

2005년 3월에는 북한에서도 고병원성 H7 변종이 발견됐다. H5의 치명성과

H7의 전염성으로 무장한 ‘최후 심판’의 재조합형 조류 독감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류라는 종은 지금까지는 운 좋게도 잘 도망쳐 왔는지 모른다.

8년 동안 H5N1을 연구한 과학자 켄 쇼트리지는 이 교활한 ‘문 앞의 괴물’[이 책의 원래 제목]이 종 전체를 말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철새,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는 물론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고양이 집단 ‘살처분’을 자행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누적된 상황은 최후의 불길한 사태를 향해 초침을 째깍거리며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에 비유할 만하다.

폭주 기관차

더구나 현대의 광범한 교역과 발달된 교통 체계 때문에 지역적인 사건이 종 종 세계적인 사태로 발전하곤 한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조류 독감 대유행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2003년 2월 중국 광저우의 한 의사가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에 도착했다. 그는 한 호텔에 투숙했고, 같은 층에 머물던 손님 16명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감염된 호텔 투숙객들은 계속해서 각기 다른 다음 목적지로 여행했고 사스는 곧 맹아적 형태의 전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변했다.

나중에 정리된 발병 사태의 흐름도에 따르면 홍콩 1백95건, 싱가포르 71건, 베트남 58건, 캐나다 29건, 에이레와 미국이 각각 1건씩이었다. “전 세계적 발병

사태는 이렇게 홍콩의 호텔 한 층에서, 단 하루 만에, 단 한 사람에게 의해 시작됐다.”

당시의 돌연한 공포와 히스테리를 어렴풋이나마 기억할 것이다. 21세기 최초의 대유행병은 26개국에서 약 8천5백 명을 감염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사스 환자의 약 11퍼센트(9백16명)가 사망했다. 큰 희생을 치렀지만 사스는 7월 초에 진압됐다. 운이 좋았다. 하지만 한 번 성공했으니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만약 최초의 감염자들이 토론토나 싱가포르가 아니라 방글라데시나 아프가니스탄, 자이르로 날아갔다면 어땠을까?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제3세계의 도시들에 대유행병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공공 보건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선례가 1994년 9월에 발생했다. 인도의 수라트에서 범유행성 폐렴이 발병했던 것이다. 공포가 확산됐다. 자기 병원을 경영하던 의사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도시를 빠져나갔다. 항생제 사재기가 만연했고, 정부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군대가 동원돼 빈민을 격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침묵했고, 다른 국가들은 감염국에 오명을 뒤집어씌웠다. 이 속에서 유행병, 슬럼의 빈곤, 신자유주의 정책이 맺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범유행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수라트의 경험이 아마도 1백 배는 확대·증폭될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선데이 헤럴드〉는 대유행병이 발생하면 사회가 와해 직전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한 영국 정부의 보고서 내용을 폭로했다. “전체 국민의 최소 25

퍼센트가 6~8주 만에 병에 걸릴 것이다. ... 사망자는 전체 인구의 1퍼센트 가량 될 것이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도 국회에 제출한 ‘2006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 계획’에서 위험을 경고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가능성이 높고, ... 외래환자 9백7만여 명, 입원환자 23만여 명, 사망자 5만 4천여 명에 이르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유일한 초기 방어 수단으로 알려진 타미플루를 전체 인구의 2퍼센트에게 지급할 분량밖에 확보해 두지 않았다. 1백만 명분의 타미플루는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미FTA 협정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타미플루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 책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과학사와 그를 둘러싼 정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확산되는 슬럼, 기업형 축산업과 패스트푸드 산업, 부패한 정부가 이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할 수 있는 생태적 조건을 창출했고, 이윤에 눈이 먼 제약회사들과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만약에 대비한 백신 개발과 충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가로막고 있다고 폭로한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세계적 유행병으로 발전한다면 그 결과는 파국일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 대재앙을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도 제시한다. 아시아의 대유행병 차단 노력에 기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백신 생산을 사기업 부문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전하는 등 전 지구적 보건 자원을 이윤이 아니라 민중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연못에서 헤엄치는 오리와 이 옷집 고양이이를 불안하게 바라보면서 H5N1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실태와 대책이 궁금하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의 역자인 장병선 씨는 연세대에서 글쓰기와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책갈피), 《보통 사람을 위한 제국 가이드》(이후), 《렘브란트와 혁명》(책갈피) 등을 번역했다. 그는 마이크 데이비스의 또 하나의 역작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홀로코스트》의 번역을 최근 마쳤고 곧 출판될 예정이다.

》4면에서 이어짐

KLA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코소보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과 로마인(흔히 집시라고 불린다)에 대한 조직적 학살을 저질렀다.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지원하는 조직인 ‘프리덤 하우스’조차 이 점을 인정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02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1999년 중반에 나토군이 코소보에 주둔한 이후 반대 방향으로 민족청소가 자행됐다. ... 25만 명이 넘는 세르비아인, 로마인, 보스니아인, 크

로티아인, 터키인, 유대인 등이 이 지역을 떠나야 했다.”

유엔은 세르비아 측이 군대를 철수하는 대신에 코소보에게 독립국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은 약속을 어기고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코소보 주민의 다수를 이루는 알바니아인들이 세르비아 정부의 통치 아래 차별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토가 세르비아를 침략한 것은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서방 국가들

의 ‘인도주의적 우려’ 때문이 아니었다.

미국의 발칸 특사인 리처드 홀부르크가 인정했듯이 그것은 “나토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자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주고 싶었다.

현재 1만 6천 명의 나토군이 코소보에 주둔중이다. 유엔은 통치 업무를 유럽연합에게 넘길 계획이다.

또 다른 옛 유고슬로비아 공화국 출신 국가인 보스니아는 여전히 나토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사실상 서방 국가들의 식민지가 됐다.

1990년대에 유고슬라비아가 쪼개졌을 때, 옛 공산당 통치자들은 대중의 불만을 민족주의를 통해 달래려고 했다. 이것이 민족 간 갈등을 부추겼고, 곧 전쟁과 민족청소로 이어졌다.

옛 유고슬라비아와 발칸반도는 다양한 민족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중 한 집단에 기초해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는 민족 학살을 낳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좌파들이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발칸반도 사회주의 연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첼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2월 25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8년 전 위험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발의자인 한나라당 고조흥은 2퍼센트 범위로 가산점 비율을 줄였고, 횡수 제한과 선발 인원의 20퍼센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가산점 2퍼센트로 시뮬레이션 해 보면 9급 공무원의 경우 남성 합격자가 10퍼센트 늘고, 7급의 경우는 30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

나는 현재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에서 과학 과목들의 신규 임용은 1~2명에 불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가산점 부활 뉴스를 들으며 ‘교사의 꿈을 접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억압적인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작 1천명 정도다. 국가는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생색만 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떠넘겨진다. 이들은 이미 취업 경쟁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말이다.

남성들의 군가산점 지지율은 93퍼센트에 달한다. 왜냐하면 ‘신의 아들’들은 가지 않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

의 아들’만 가야 하는 군대이기 때문이다. 군필자들이 가지는 불만과 보상 심리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군가산점을 지지한다면 실질적인 보상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고, 군 징병제를 강화하는 논리만 커질 뿐이다.

제대군인에게 연금 지원 같은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또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군 복무 기간을 줄이고, 임금을 현실화하는 개혁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효과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부활은 막아야 한다.

김연오

꼬빌 동지를 떠나 보내며

꼬빌 동지가 12년 7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접고 고향인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 마숨, 까지만, 라주 동지 추방 이후, 유난히 힘들어하던 꼬빌은 그 즈음부터 몇 차례 출국 준비를 했다. 고향행 티켓까지 끊어 놓았던 꼬빌은 이주노조 농성 투쟁 때문에 차마 공항으로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출국 날짜를 연기해 왔다.

몇 차례 송별회를 하면서도 결국 가지 못하고 농성장에 들르면 제일 반갑게 맞곤 했다. 나는 출국 하루 전에 소식을 접하고선 알리지도 않고 갈 생각이었나 싶어 어찌나 야속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전화통에 대고 소리부터 질러댔더니, 평소와 달리 ‘미안하다’며 고분고분한 목소리가 더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출국 당일 점심때 만나 같이 식사를 했다. 방글라데시에 놀러오면 24시간 소고기를 구워주겠다며, 대신 김치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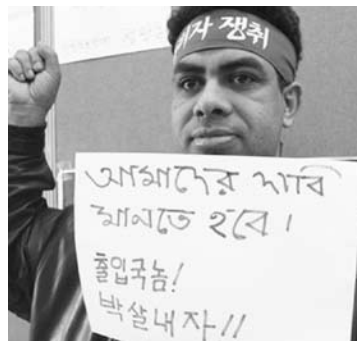
소주를 반드시 갖고 오라고 했다.

사람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짐승처럼 줄줄이 엮여 가둬 놓고 태워 죽이는 이 끔찍한 나라의 음식을 꼬빌은 가기도 전에 벌써 그리워했다. 꼬빌은 20대 중반에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으로 왔다. 그리고 30대가 되기도 전에 오른손 검지를 잃었다.

평소처럼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옛날 애길 하던 꼬빌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리곤 쌍꺼풀 진한 큰 눈이 껌뻑이는가 싶더니, 이내 울고 있었다. 얼마간 말없이 함께 울었다.

내일모레 마흔인 이 노총각이 그토록 눈물나게 보고싶다던 엄마와 친구들을 이제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비자 쟁취해서 제주도로 놀러가자”던 그의 소박한 소망을 이 나라 정부는 끝까지 들어 주지 않았다.

언젠가 꼬빌이 그랬다. 이 나라는 나



한테 손가락도 뺏어가고, 인권도 뺏어가고, 자유도 뺏아갔지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동지를 뺏고, 새로운 꿈을 쫓다고.

꼬빌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돌아가서도 열심히 투쟁할 거라고 했다. 한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일궈 온 꼬빌에 이어 제2, 제3의 꼬빌이 수도 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 모두와 “노동비자 쟁취해서 제주도로 놀러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전현정

대학 맑스주의 포럼

고려대

일시: 3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연사: 송선화(이랜드 일반노조대의원), 정진희(‘다함께’ 활동가)
장소: 고려대(추후 공지)
문의: 010-4789-4202

지역 사회 포럼

서울 남부

‘테러와의 전쟁’ 7년과 오늘날의 세계
일시: 3월 5일(수) 오후 8시
연사: 김광일(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다함께’ 운영위원)
장소: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아수역 7번 출구에서 50미터 거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2401-1987

서부대학 통합

일시: 3월 5일(수) 오후 6시
연사: 윤송단(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여성국장), 최미진(‘다함께’ 활동가)
장소: 이화여대(추후 공지)
문의: 010-2263-1106

건대·한양대

일시: 3월 5일(수) 오후 6시
연사: 류민희(‘다함께’ 활동가, 민주노동당 성평등 교육 강사)
문의: 010-6876-5349

3·8 국제 여성의 날 기념 — 21세기 여성해방

서울 서부

3·8 국제여성의 날 기념 — 21세기 여성해방

일시: 2월 26일(화) 오후 8시
연사: 윤송단(이랜드일반노동조합 여성국장), 정진희(‘다함께’ 활동가)
장소: 신촌 토즈(신촌역 3번 출구 연세대 방향)
참가비: 3천 원
문의: 017-267-0400

주간 <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02-2271-2395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민주노동당 활동을 문제 삼은 계약해지를 철회하라

성향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다니던 나는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해지 됐다. 이는 부당한 정치활동 탄압이자, 불법적인 계약해지다.

나는 비정규직으로 5년째 계약갱신 됐고, 재연장 시점까지 10개월이나 남은 상태였다. 게다가 지난해 단체협상에서 나를 포함해 2년 이상 비정규직 14명을 정규직화한다고 합의해, 정규직 노조와 인사관리자로부터 별정직 전환 설명과 함께 격려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발령 시점이 다가오던 12월 초, 공단은 민주노동당 강남지역위 홈페이지를 뒤져서 찾은 ‘활동 증거’를 내세워 내 활동이 인사규정 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탈당할 수 없었다. 계약해지 협박에 두려움도 앞서고, “일자리가 우선이니 탈당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가까운 선·후배 직장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 갈등도 했지만,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2000년에 입당한 나는 전업 노동자로서 많은 시간은 못 내도 여가 시간을 쪼개서 전쟁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민주노동당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런 활동이 해고 사유가 되는 현실에 나는 온몸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한 이튿날, 공



권영길 후보 선거운동에 참가한 성향아 동지

단 측은 내가 민주노동당원임을 다시 확인하며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고, 결국 계약해지 됐다.

날벼락

그러나 공단이 해고 사유로 내세운 인사규정 자체가 헌법 19조(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게다가 2002년 대전지방법원과 2004년 헌법재판소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 활동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주문도 있다.

공단 측은 나를 해고할 때 또 한 명의 여성 계약직을 아무 이유 없이 함께 내쫓

았다. 그는 6년 8개월간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나오고 30분 늦게 퇴근하라’는 지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명절보너스 한 번 받아 보지 못하며 묵묵히 일했는데 말이다. 이런 일들은 비정규직 악법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 민주노동당·공공운수연맹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냈는데 앞으로 소송도 할 계획이다. 지난 2월 5일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공공연맹 정책위원장 등이 공단 이사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해고는 앞으로 추진될 공단 구조조정을 앞둔 사전 공격이기도 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약한 고리를 먼저 치는 것이다. 다음 대상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가 투쟁을 시작하자, 많은 정규직 동료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 “웬 날벼락이냐! 정규직 전환한다고 몇 달간 떠들어 놓고, 난데없는 해고냐! 이럴 순 없다. 둘이 푹푹 뭉쳐서 꼭 복직하길 바란다”며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다.

공단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았지만, 우리는 복직을 위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알리안츠생명노조의 파업은 계속된다

사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시행에 맞서 지난 1월 23일 파업에 돌입한 알리안츠생명노조는 설날 연휴를 넘겨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설날 연휴에도 지점장들은 연휴를 반납하고 거점을 지키며 파업을 지속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1백50일 넘게 파업 중인 코스콤 비정규지부와 함께 1천5백여 명이 모이는 연대 집회를 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알리안츠생명 어드바이저(보험설계사) 3백여 명도 함께했다. 파업에 영향 받은 보험설계사들은 알리안츠생명 어드바이저 협의회(준)를 만들어 노조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노조는 충주, 원주, 고성 등 거점에 집결해 파업 동력을 유지하는 한편, 파업 파고 행동을 하고 있는 지역본부와 영업단을 방문하는 순회 투쟁을 하고 있다.

사측은 이런 노조원들의 투지와 보험설계사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번 성과급제 강행을 통해 노조를 확실히 무력화하고 구조조정 기반을 다지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 탄압 법률자문으로 악명 높은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노조에 가입한 지점장 가운데 4명을 해고하고 6명을 징계했다.

사측은 아울러 지역 본부장과 영업단장을 이용해 노조원들을 협박, 회유하고 있다. 조정섭 조합원(지점장)은 “회사가 우리를 범죄자로 내몰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지와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 산하 노조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투쟁 물품과 지지금도 전달됐다. 국제사무직노조(UNI) 한국협의회는 독일노총이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조직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측에 좀 더 타격을 줄 수는 있는 본사 점거 등 적극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지와 이런 단호한 전술이 강력한 연대와 연결되면 승리는 앞당겨질 것이다.

김영재

기아차 화성공장의 투쟁

기아차에서 지난해 비정규직 투쟁의 패배 이후 사측은 엔진 구동부서의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과 투쟁으로 실패했다. 이 때부터 기아차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올해 초 사측은 또다시 조립 2공장을 중심으로 강제 전환배치를 시도했고 안타깝게도 19대 집행부는 96명에 대한 전환배치를 사측과 합의하고 말았다. 선봉대와 2공장 대의원, 현장조합원들은 이에 맞서 한 달이 넘도록 출퇴근 선전전과 자발적 잔업거부를 하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19대 집행부는 ‘회사 위기’설에 흔들려 잘못된 합의를 한 것이다.

이에 강제 전환배치 철회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요구로 2월 11일부터 대의원대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19대 집행부는 ‘총고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재협의를 거부했고, 1주일 동안 지루한 공방만 계속됐다.

이를 지켜보다 분노한 2명의 활동가가 2월 15일부터 조립 1공장 설비구간을 점거하고 극단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두 명의 투사들의 의지는 높이 살만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동의와 집단 행동을 조직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결국 18일 속개된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가 ‘보충적 성격의 협의를 통해 강제

전환배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고 수정안을 내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성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충실히 관철되고 사측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 행동이 아닌 현장조합원들의 대중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비록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도 현장 조합원들(특히 선진적 부분)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대중적 투쟁만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우용(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살인적 등록금 인상 균등한 교육 기회는 돈 없으면 그림의 떡

대학 등록금은 매년 물가 인상률의 2~3배 씩 치솟았다. 물가가 8배 인상된 지난 32년 동안 등록금은 26배로 폭등했다. 급기야 2007년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은 7백만 원에 육박하게 됐는데 대학 당국들은 올해에도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펴낸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보면 대학생 중 15퍼센트가 등록금 때문에 휴학한 경험이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도 전체의 66.5퍼센트나 된다. “대학생인지 알바생인지 헷갈린다”라는 자조가 나올 법도 하다.

아르바이트로도 학비를 마련하기 힘든

학생들은 결국 대출을 받는다. 27.8퍼센트나 되는 학생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런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이자율이 시중 은행 금리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아서, 대출 학생 중 17퍼센트가 ‘연체’를 경험했고 이들 중 20퍼센트에 이르는 3천4백13명(2007년 12월 현재)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올해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자율은 7.65퍼센트로 사상 최고인데다, 2퍼센트의 저리 대출 방식도 아예 없애 버렸다. 높은 이자 때문에 정작 저소득층 자녀들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마저 이용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자금대출 예산을 1천억 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예산 1백억 원을 삭감했다. 2008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예산도 3천9백억 원 중 1천억 원이 삭감됐다. 한 마디로 돈이 없으면 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높은 등록금 부담 때문에, 70퍼센트 넘는 학생이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인식하고, 63.5퍼센트의 학생이 등록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 앞에서 등록금 인



이명박 인수위, ‘등록금 인상 반대? 입닥체!’

상에 항의하던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 경찰의 쏘살이 연행이었다. 돈 없으면 균등한 교육 기회도 없다는 게 신자유주의 한국의 현주소다.

박건희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 직무대행 인터뷰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여수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여수 화재 참사가 보여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04년 이후 야만적인 단속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심지어 문 잠그고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문을 부수고 잡아갔어요. 길거리에서 영장 없이 이주노동자들 잡아 수색하고, 공장 안에 들어가 기계를 멈추고 수색하고,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죠. 그래서 보호소마다 사람들을 넣을 데가 없어서 한 방에 18명씩 꽂아있었어요. 이런 야만적인 단속의 결과가 여수 참사인 것이지요. 정부는 지금 여수보호소를 리모델링해 재개장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이주노동자들을 다시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애초에 여수보호소를 다시는 열지 않겠다고, 추모관 건립 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보호소를 열겠다고 합니다.

여수 화재 참사 이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어떤 변화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 야만적 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정부는 여수 참사 뒤 한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몇 개월 지나자 다시 단속을 시작했어요. 특히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같이 집중 단속을 했죠. 지난해

말에는 이주노조 지도부 3명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여수 참사 때 이주노조가 열심히 투쟁했기 때문에 이번 집중 단속에서 이주노조를 공격한 것입니다.

또, 지난 1월에 있었던 이천 화재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14명의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40명이 죽었는데, 거기엔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없었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죠.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안전 장치도 없이, 사람은 뒷전이고 이윤만이 우선인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 사건이었죠.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어떻게 투쟁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책 자체가 없어요.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말뿐이긴 했지만 이런저런 약속이라도 했던 말이죠. 이명박이 어떤 사람입니까? 현대건설 사장 시절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참 걱정입니다.

지금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준비하고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것을 최대한 저지해야 합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

되고 시행된다면 여수 참사 못지 않게 끔찍한 인권 침해가 벌어질 겁니다. 이번 여수 참사 1주년을 계기로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야 합니다.

이 속에서 이주노조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투쟁할수록 연대도 더 확대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승리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결의문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단결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노동자들의 일 자리를 빼앗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이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맞서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가 연대해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 정리
조명훈

여수 화재 참사 1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지난해 이맘때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불에 타고 가스에 질식사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부상자들 중 14명이 한국에 있지만 치료비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여수보호소 안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과 재발방지 다짐대회’를 하면서 여수보호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지금도 보호소에서 작은 ‘소란’의 기미만 보여도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한다며 이주노동자를 이른바 ‘징벌방’에 격리 수용한 뒤 추방시켜 버린다. 네팔 이주노동자 수바수 동지는 보호소 내에서 건강이 악화해 외부 진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그의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온 몸을 묶은 채 보호소에서 빼내 추방해 버렸다.

여수 참사는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잡아 가둔 정책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 뒤 단속은 오히려 더 강화됐고 외국인보호소는 불잡혀 구금된 이주노동자들로 넘쳐났다. 의정부 지역에서는 단속반이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 모든 외국인을 내리게 한 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는 단속에 맞서 싸워 온 이주노조 지도부를 ‘제거’ 대상으로 정하고, 법무부의 치밀한 기획 하에 지난해 11월 한달 한시에 불잡아 추방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인간사냥꾼’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려 한다.

지난 1년간 이런 야만적인 정부의 인종차별 공격과 탄압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져 왔다. 여수 화재 참사 항의 운동의 바통을 이어받아 8월부터 단속 반대 운동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운동이 벌어졌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 단속에 항의해 결성된 이주탄압분쇄비대위의 투쟁과 항의 농성은 두 달을 넘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주노조는 훌륭한 지도자 3명을 잃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노조 재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 항의 운동은 2월 여수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리는 2월 24일 집회로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 집회는 여수 참사 뒤 악화돼 온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자리다.

이명박 정부 취임 전날 열리는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뤄내, 예고되는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운동의 훌륭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주기 희생자 추모

단속 · 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운동 탄압 분쇄 결의대회

일시 : 2008년 2월 24일(일) 오후 2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집회 후 종로타워까지 행진)

주최 : 이주공동행동, 이주운동탄압분쇄비대위